

POLITICS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정치 여론조사·보도 공정성’ 민형배 의원, 국회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0일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국제펜데믹인텔리전스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제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우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선거여론 조사와 공정한 언론보도’라는 발제에서 “한국 정치여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를 개정해 선거를 앞두고 6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할당표집을 버리고 확률표집을 적용한 조사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확률표집 응답자에게 정당 불응체계 확립과 △특히 언론사의 경우 스스로 여론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설계에 참여해 결과 해석에 기여하는 이원적, 방법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언더리 정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를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다”며 그 증거로 ‘명태군 게이트’를 예로 들었다.

민 의원은 “공정한 여론조사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선거와 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주권자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부정확한 ARS 조사방식 규제, 국가조사과학원 설립 등 단계적 접근을 거쳐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관광진흥기금 융자 110억 지원 전남도, 30개소 대상 금리 1%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로 30개 업체를 선정하고, 1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연말 계약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려움 여행사와 관광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금액을 기존 6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규모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이다. 시설자금은 신축 30억 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관광식당업 신축 5억원 이내다. 운영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 지원 대상은 관광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13개 업체 72억원이며, 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17개 업체 38억원이다. 지원 대상업체는 9월 3일까지 취급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최저인 1%가 적용된다. 이현규 기자

“국민 명령 따라 신속한 파면 결정 내려야”

민주당 시·도지사 공동입장문…헌재에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

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에 국민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국력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극우 극렬 지지자를 부추기며 나라를 내

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윤석열의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이다.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절단할 것이므로,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윤석방 후폭풍…정치권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확산

여, 대검에 공수처장…야, 공수처에 검찰총장

여야는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가열된 여야의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한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 국력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정문



야당 의원들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동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의원, 박근혜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년

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국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오 공수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정문

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을 향해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5당은 고발에 앞서 국회 소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심 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대변인 법률위원장은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남용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부당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 지휘, 사건 이첩 지시 및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한 부분에 직권남용죄를 묻는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근택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당시가 지금의 대통령실 민정수석인 김주현”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부남 “공무원시험답안도 ‘체포적부심 날로 계산’

“검찰, 법원이 구속기간서 제외 않았음에도 즉시항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기록이 아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2일 모두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 구속 가능 기간은 10일에서 2일을 더한 총 12일로 인정한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했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한 선고된 지난 2012년 이후 시험이다.

검찰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해 법원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를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시간을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지난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에도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제 시 구인 검찰공무원을 뽑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을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공무원을 채용했고, 실무적으로도 여태껏 날짜를 기준으로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음에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는 이를 남용하고, 행사해야 할 때는 행사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주중섭 도의원,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전남도의회 주중섭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주중섭 의원은 여주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맡아 여주시역 사회적 약자 및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제7대 여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제12대 전남도의회원으로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남도 산업단지 지속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수국가산단 등 유기에 처한



전남지역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주 의원은 “국내외 경제의 불안으로 경기는 악화되고 서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란이 종식되고 무너진 사회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광주 유치 나서

주민자치연합 회장단 취임식…지방자치 30년 도약

광주시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를 나선다.

광주시는 엑스포 유치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대 광주시 주민자치연합 회장단 취임식에서 “주민자치회 전환과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전환의 원년인 만큼 정부 주관 ‘지방시대 엑스포’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는 김영삼·김대중 정치지도자의 단식으로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으로 균형발전을 모색했다”며 “주민자치는 주민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올해를 명실상부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전국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평균이 44%이지만 광주는 96개동 전체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 지지여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한발 앞서 노력하겠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야말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든든한 자양분이 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2022년부터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통합 개최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참여의 장으로 주민자치 행사 등이 포함되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17개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 행사다.

제5대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서용규·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및 시의원, 문인 북극회장,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임원 및 96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동별 주민자치 성과 공유, 대표회장 취임사, 축사, 대자보 도

시 실천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는 광주지역 96개동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3200여명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다.

지난달 새로 구성된 제5대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은 민기욱 대표회장, 김호성·김재만·김진호·김대성 공동회장, 장동국 사무총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